

10 오피니언

사설

절차·내용 공감해야 정당성 얻을 것

법인이 이사회에서 논의한 총장 선임제 가안을 대학에 전달했다. 제17대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법인이 내놓은 3가지 안이 지난 16대에 비해 구성원 참여를 축소한 방식을 취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은 기다렸던 소식임에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법인은 총장 후보를 압축하는 간접선출기구라고 볼 수 있는 총장후보심의위원회(총심위) 위원 구성에 우리학교 구성원을 거의 제외했다. 3가지 안을 살펴보면, A안은 이사 5인, B안은 이사 5인+이사회 추천 전문가 5인, C안은 이사 5인+이사회 추천 전문가 2인+구성원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총심위를 구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C안만이 구성원의 1/3 참여가 간접적으로 보장된 방식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대 총장선출 과정은 구성원 대표들이 총장 후보를 3인

직접 선출하고 법인이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총장 후보 3인을 압축하는 과정 속에서 법인의 개입은 최소화됐다.

물론 법인이 대학에 제안한 3가지 안은 말 그대로 가안 단계다.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구성원들의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는 최종안이 3가지 안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구성원 의견에 따라 선임제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린 것 같다.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라고 설정한 기간도 그 신뢰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법인은 지난 7월 가안을 대학에 전달하면서 27일까지 구성원 의견을 달라고 못을 박았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름 정도의 기간에 각 구성원 대표들은 자신의 단체에 의견을 묻고, 대표끼리 모여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구성원 대표들이 모여 가안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날은 대학 평의원회가 열리는 21일 단 하루 뿐이다. 게다가 법인이 제안한 3가지 안은 지난 16대가 구성원의 참여를 부분적이거나 보장했던 것에 비해 거의 봉쇄 수준으로 축소시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동안 과연 구성원 의견이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균태 총장의 임기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채로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된다면 논의의 결과는 두고두고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제도의 정당성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9월에 대학에 전달된 선임제 가안은 한참 전에 전달됐어야 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원

들의 치열한 의견 개진과 수렴 과정을 충분한 시간 속에서 진행시켰어야 했다. 법인은 룰을 만드는 역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룰이 결정되기까지 복잡한 일정 관리의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한 가지 더 있다. 애초 법인은 3가지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딜로이트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3가지 안을 놓고 보자면 결국 보장됐던 구성원의 투표권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사라진 꼴이다.

걱정되는 부분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과, 잡음이 결과에 미칠 영향이다. 총장의 자질은 둘째 문제다. 선임하는 과정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총장을 데려오더라도 구성원의 신임을 얻기 힘들다. 벌써부터 불협화음의 조짐을 보이는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가길 바란다.

세시봉

디지털 권력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우리는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핸드폰과 손가락 하나면 누워서 장을 보거나 수업을 듣고, 일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이점은 어느새 세상을 살아가는 필수 요소가 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철도공사는 100% 비대면 방식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했다. 이 때문일까. 서울 역엔 좌석 중 10%를 정보화 취약계층에 29일 하루 동안 우선 예매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어르신으로 가득했다. 현장 예매로는 기본 한 시간을 기다려야 승차권을 구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입석뿐이었다는 점이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화 기기를 사용한 예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60.4%는 현재 예매 방식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매해 반복되는 비대면 예매 문제에 앞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 시작은 '키오스크'였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카페나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주문 시스템은 일상화됐다. 이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3년 만에 약 16배 급증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연령층마다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양극을 달리고 있다. 키오스크 이용 관련 인식 조사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주문을 포기한 사람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작고 복잡한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 여러 단계의 관문을 넘어가야 하는 탓이다. 불친절해져 가는 사회 속 고령층은 이제 기계 눈치마저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문제에도 여전히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모습은 부족하다. 세상의 시선 또한 소외계층을 외면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고령층이 된다. 점점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 속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소외 없는 공간으로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당장 자신이 사용해야 하는 건물도 쉽게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힘들게 들어선 순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수십 수백 개의 계단은 장애학생에게 거대한 장벽과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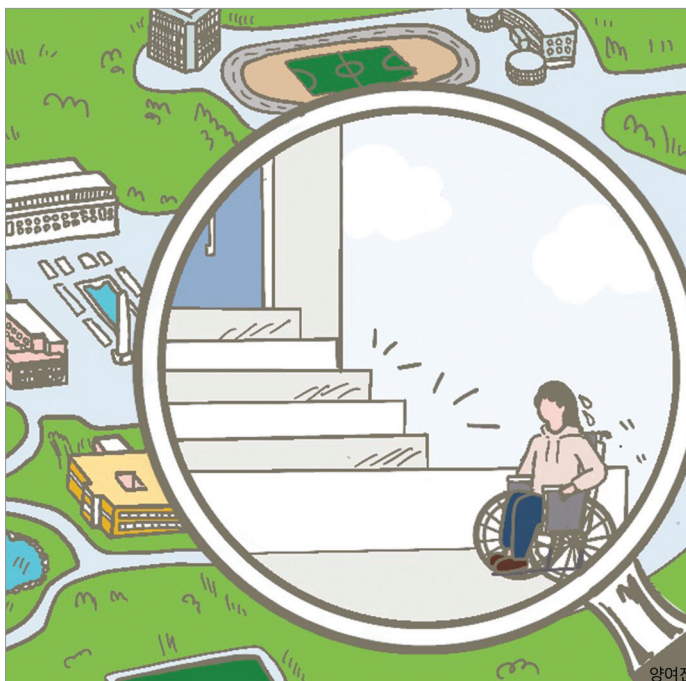
우리가 늘 당연하게 오고 가는 이 학교가 장애학생에게는 참 각박한 공간이 된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환경과 화장실 이용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 부족한 접근성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그들은 소외된다. 장애학생의 불편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돼버렸다.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학교를 여러 차례 돌며 막막함을 느꼈

다. 이동에 아무 문제가 없는 나조차도 계단을 한 칸씩 오르며 느꼈던 고됨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하루 일과였을까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밝고 예쁘게 리모델링된 공간 안에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고질적이다. 하지만 결국 문제의 근원은 관심 부재다.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것도, 정확한 규정을 몰랐다는 것도 전부 관심 하나만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장애학생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은 채 살아가는 구성원도 대다수다. 학교에서 그들은 그저 잊힌 존재에 늘 머물러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을 당장 개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만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작은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모두의 관심이 모여 비로소 장애학생 이동권 문제, 더 나아가서는 소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



만평 문턱의 높이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